

# 수출 우상향 유지 총력... 무역보험 252조 역대최대 지원

## 산업부, 2025 주요업무 계획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중심  
트럼프 2기 대응체계 구축

무역위원회 전면확대·개편  
중소 단기수출보험료 50% 연장  
수출신용보증 5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위해 역대 최대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해 무역구제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최근 반도체 등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 시장잠식과 기술추격 등 어려움이 심화하는 데다, 국내 정치 불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며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엇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견어내고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창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우선 트럼프 2기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한다. 또 한-미간 새로운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조선 TF'를 운영해 양국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

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무엇보다 올해 수출이 반도체 단가 하락세,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역대 최대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환율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한도도 3조원으로 확대하고, 개별기업 보증 한도도 최

대 150% 상향하는 한편,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상승모멘텀이 제약될 우려에 대응해 올해 외투 350억달러를 목표로 전방위 유치 활동에 나선다.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오던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는 한편,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IR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한다. 또 현금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상향하고, 대출우대와 관세감면 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해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1분기)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가

속화하고,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자동차의 경우 당면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 발표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 자동차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전력수급과 원전 수출, 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에너지 안보 관련 핵심현안에도 중점 대응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일감은 올해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SMR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상반기),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가계대출 옥죄고 예금보호 1억으로 상향

### 금융위, 2025 주요업무 계획

7월 3단계 DSR 도입해 '부채 관리' 전세대출 보증 100%→90% 인하  
정책서민금융 연 10조→11조 확대

정부가 올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줄인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오는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무역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며 "산업·금융 전반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금융위는 우선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호기금(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예보기금은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를 지원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제도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한다.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1.5%포인트(p)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적용(비수도권 0.75%, 수도권 1.2%)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떤 가계 대출을 받든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돼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인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에서 공급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받았더라도 부실이 발생하면 HUG와 SGI가 100% 보증했다. HUG·SGI의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이 없는 탓에 심사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일부를 보증케 해 부실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권 사무처장은 "앞으로는 은행도 상환능력을 파악해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가 의견이 모아진 만큼 보증비율을 90%로 빠르게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에 공급된 247조5000억원 중 136조원을 5대 중점 전략 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사용한다. 상반기 중 136조원의 60%를 사용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자산담보부증권(P-CBO) 규모는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2조8000

억원으로 확대한다. 적격기관투자자(QIB)를 활용해 중견기업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중도상환수수료 1.4%→0.7%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의 채무부담을 경감한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을 장기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폐업한 자주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의 만기를 30년으로 설정해 3%의 금리로 갚을 수 있다.

대출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린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책정한다.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비용만 계산해 수수료에 반영한다. 권 사무처장은 수수료가 현재 1.2~1.4%에서 0.6~0.7%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는 연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햇살론은 1400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올해 내수회복이 더뎠다는 등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서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대리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고드름 뽕뽕 '한파주의보'

기상청이 8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에 한파 주의보를 발효한 가운데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변에 고드름이 맺혀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경상수지 93억 달러... 7개월 연속 흑자

한은, 2024년 11월 국제수지

작년 11월 경상수지가 93억 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율 축소에도 국제유가 하락에 수입이 더 크게 줄며 흑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 소멸에 적자 폭이 확대됐고, 본원소득수지는 분기 배당 지급에 흑자 폭이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2024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다.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으로는 835억4000만 달러로 2015년(970억8000만 달러)과 2016년(905억6000만 달러)에

이은 역대 3위 기록을 보였다.

경상수지는 2023년 4월 적자(13억7000만 달러)로 기록했지만 5월(23억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지난해 3월까지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러다 4월에는 해외 배당 지급에 2억8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가 5월(89억2250만 달러)부터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97억5000만 달러로 20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전월(+81억2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은 증가세는 지속됐지만 승용차와 석유제품, 기계류·정밀기기 등은 감소했다.

수출은 571억 달러로 전월대비 1.2% 증가해 1년 2개월째 상승했다. 다만 전월 상승률(4.0%)보다는 축소됐다.

/나유리 기자